

이 보도자료는 2023. 4. 10.(월)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2023. 4. 10.(월)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팩스 02-3480-2704

자료문의 :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  
전화번호 : 02-3480-2290  
주책임자 : 대검 마조과장 김보성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 전국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 설치·운영으로 마약범죄 근절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마약이 주부, 공무원, 학생 등 모든 연령·계층에 파고들면서,
  - 마약범죄 폭증, 2차 강력범죄 빈발에 이어 최근에는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까지 발생하였음
- '15년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이래 마약사범 급증으로 '22년 역대 최악(18,395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고, 현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 오늘(4. 10.)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 다음과 같이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공동본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는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
  - 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 대응, 대규모 현장수사 상호 지원
  - ② 온라인 모니터링(기억력·집중력 향상, 다이어트약 등)과 통관검사(마약류 의심 약물·음료) 등을 강화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수사

③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 처벌 조항 적용 및 구속수사 원칙,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④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추진 등

●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서울시,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 ①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서울시), ②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 강화(경찰·서울시·법무부 등), ③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식약처·서울시), ④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

●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1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23. 4. 10.(월) 10:00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12명
- (회의 배경) 최근 마약범죄의 폭증은 개인 중독의 문제를 넘어,
  - ①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케 한 후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신종범죄의 등장, ②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등 2차 강력범죄 발생, ③ 마약사범이 해외에서 총기까지 밀수 하는 사례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
  - 마약범죄의 확산세를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미국은 DEA(마약단속국), HSI(국토안보부), 연방·주 검찰, FBI, 주경찰 등 복수기관이 집중적으로 마약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마약확산을 막지 못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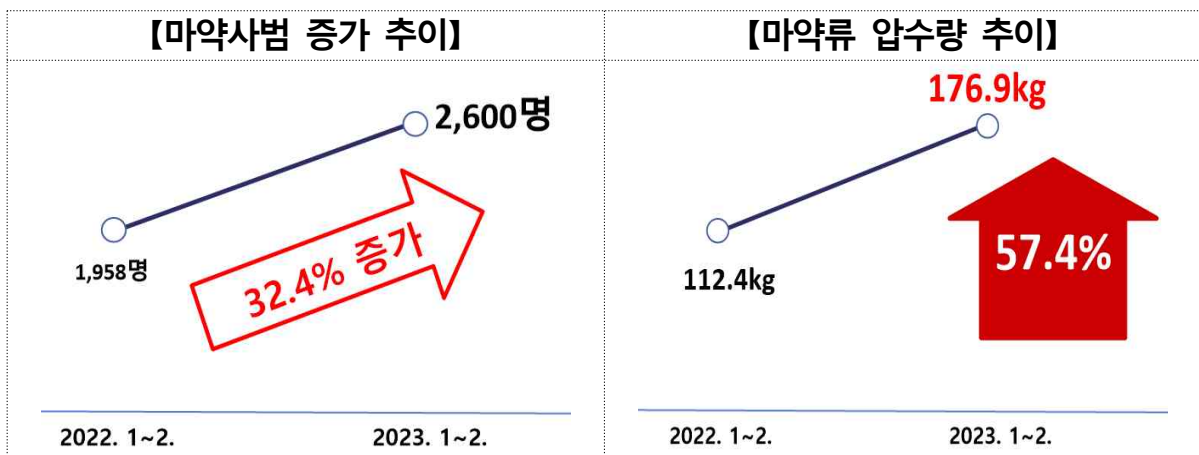
- ▶ '23. 2. 서울신문 「우리 이미 늦었다' 절망, '좀비 마약'이 삼킨 미국 실제 상황」
- ▶ '23. 1. 국민일보 「6년만에 21만명 사망' 세계 최강국 미국, 펜타닐에 붕괴 중」
- ▶ '23. 1. 파이낸셜뉴스 「팔 다리 잘려도 계속 맞는 좀비 마약' 미국서 중독자 급증」

- (회의 결과) 여러기관이 각자 수사해도 근절하기 어려운 마약범죄에 적극대응하고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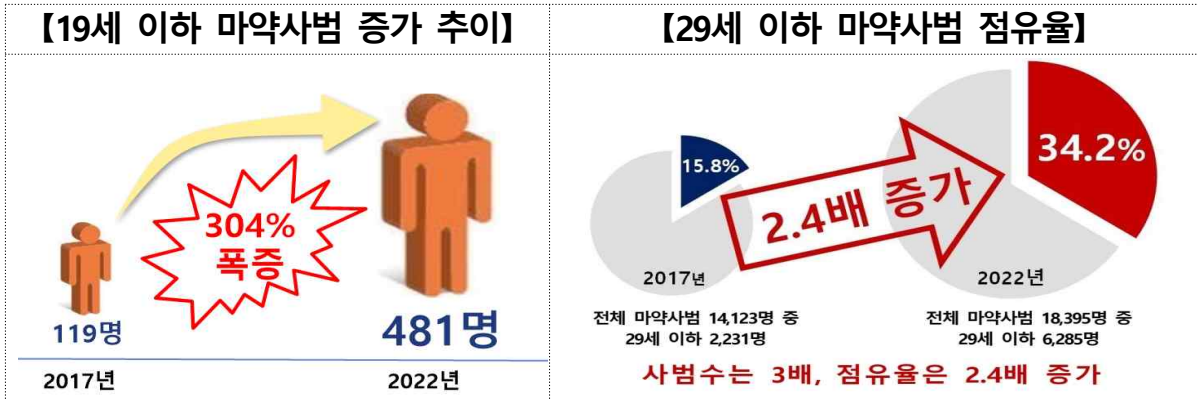
## 2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 ▣ 마약류 범죄 현황

- (총 마약사범) '23. 1~2.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인 전년 동기('22. 1~2. 1,958명) 대비 32.4% 증가
  - '22년 마약사범은 18,395명으로, '21년 16,153명 대비 13.9% 증가
- (마약류 압수량) '23. 1~2. 마약류 압수량은 176.9kg으로 전년 동기 ('22. 1~2. 112.4kg) 대비 57.4% 증가
  - '18년 414.6kg에서 '22년 804.5kg으로 불과 5년만에 94% 급증



- (10~20대 사범)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17년 15.8%에서 '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 증가
  -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17년 119명에서 '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



- (범행 방식) ① 다크웹·SNS·가상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 ② 국제우편·해외직구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③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확산

## ▣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

-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의 문제)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은 뇌 발달 저해, 마약 중독, 의존성 및 주요 우울장애 유발 등 피해가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UN 마약범죄사무소 발간 자료, World Drug Report 2022」)
- (청소년 피해사례\*) 연예기획사 팀장이 10대 걸그룹 지망생에게 강제로 대마를 흡연하게 한 사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시음케 한 사례 등 발생
  - \* 강제로 마약류에 노출된 청소년은 피해자이므로, 치료·재활을 위해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피해지원 예정
- (청소년의 마약범죄) 호기심에 온라인으로 마약을 손쉽게 접한 10대 청소년들이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유통까지 가담한 사례도 발생

###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주요 사례>

- ▶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마약유통조직 적발 [‘23. 3. 수원지검]
  - ‘22. 12.~’23. 3.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류를 보관하며 총책의 지시에 따라 소분·포장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10대 4명 등 5명을 검거, 구속기소
- ▶ 10대 청소년들의 펜타닐 유통·투약 사건 [‘21. 4.~’22. 3. 경남도경, 창원지검]
  - 10대 중반부터 펜타닐에 중독된 후 10대 후반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하여 처방받은 펜타닐을 복용, 그것도 부족하여 밀매상으로부터 펜타닐을 수십회 매수하여 다른 10대 공범들과 투약(‘23. 1. 징역 5년 확정)
- ▶ 최근 여중생이 SNS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례 [‘23. 3. 현재 경찰 수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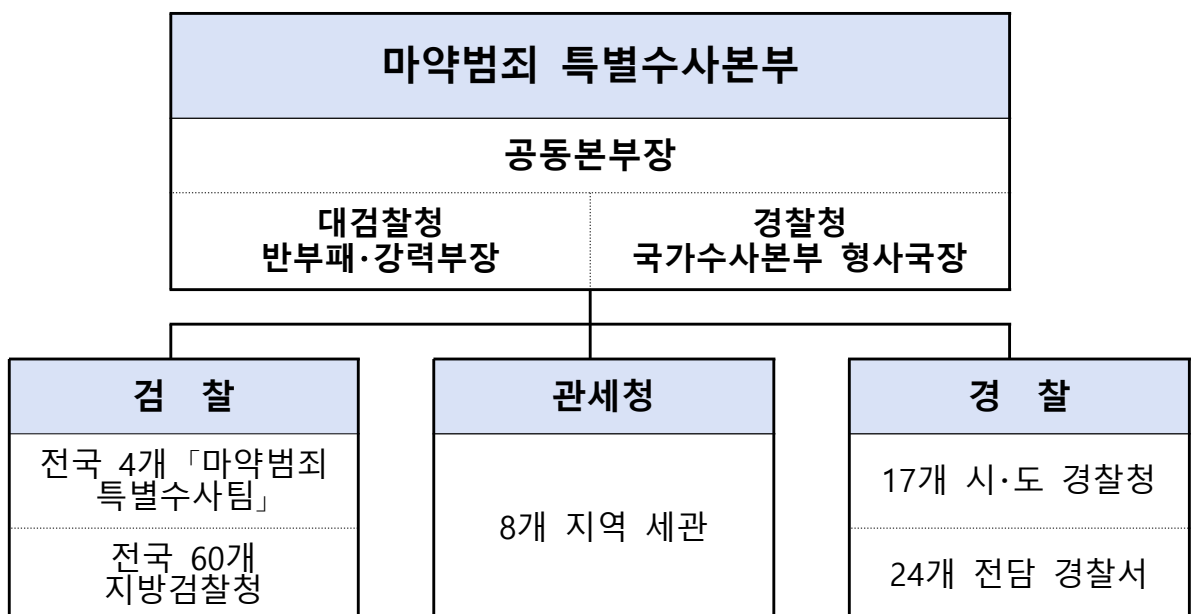
### ▣ 구성 체계 및 투입 인력 현황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으로,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
- (검 찰)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수사인력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하여,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전담검사(92명\*\*), 마약수사관(270명) 총 377명을 투입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검찰 69명(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 수사관 54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씩 4명, KISA 2명 등 총 84명 4개팀 규모로 '23. 2. 21. 출범

\*\* 강력범죄수사부 소속 검사 12명(마약사건만 전담 처리) 외에 일반 형사사건도 함께 처리하는 마약전담 지정 검사 80명도 포함

- (경 찰) 국가수사본부의 마약수사인력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투입
- (관세청)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도 함께 투입



## ▣ 운영방향

- (수사착수단계부터 공동대응) 전국 마약범죄에 대해 수사착수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의 공동대응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진행
- (전속처리체계)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함으로써, 마약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
-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확대) 전국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 긴밀한 협업
- (대규모 현장수사 상호 지원) 모니터링 자료\*의 공유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
  - \*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내역,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내역 등
- (유관기관 협업) 예방·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단서에 대하여 즉각적 수사의뢰와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토록 식약처·교육부·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 ▣ 중점 수사대상

- ①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② 인터넷 마약유통, ③ 마약 밀수출·입, ④ 의료용 마약류 제조, 유통
-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제조·유통사범 등 단속
- (통관검사 강화)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일반화물 등 모든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및 마약류 의심 약물·음료에 대한 성분분석 등 통관검사 강화

### 【건강보조 음료 수입 현황】

(단위: 천건, 천톤, 백만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2월			전년동기대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음료수	19.5	27.7	29.4	32.1	27.2	34.2	52.7	27.5	37.7	12.8	4.2	6.2	88	11	25

\* 품목분류번호 2202.10(설탕이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기준

## ■ 단속사범의 처리

- (공급사범 엄단) 마약 밀수·밀조·유통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① 범죄단체 의율, ② 구속수사, ③ 중형 구형 및 상소권 행사, ④ 검찰 사건 처리기준 강화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
-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의 가중처벌)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은 가중처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58조1항7, 8호)\* 적극의율하고 구속수사 원칙
  - \*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한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상습투약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투약사범도 동종전과, 투약횟수 등을 고려,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
- (마약 범죄수익의 박탈) 마약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부동산, 동산, 예금, 가상화폐 등 철저히 추적하고, 특별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적용으로 완전박탈하여 범죄 유인의 원천 차단
-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전상정 추진) 마약범죄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의 경미한 형이 선고되어 재범에 이르는 등 마약 투약·유통이 근절되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

### ▶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vs 집행유예 비율

- 실형 선고 비율은 '20년 53.7% → '21년 50.6% → '22년 48.1% 감소 추세
-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년 36.3% → '21년 38.1% → '22년 39.8% 증가 추세

('23. 4. 7. 대법원 발간의 '사법연감' 통계 참조)

- 더욱이 ① 마약을 이용한 신종피싱·사기도박·성범죄, ② 마약 투약 후 환각상태의 강력범죄, ③ 환각상태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등으로 무고한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마약사범은 밀수·제조·유통 뿐만 아니라 상습투약·중독사범도 중형이 선고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범죄의 양형 강화 안전상정을 추진

##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 구속 및 양형부당 항소 사례]

### 1. 구속영장 재청구, 실형선고 공소유지

- ▶ '23. 3. 필로폰 1회 매수, 1회 투약한 前 경기도지사 장남(동종전력 1회)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기각 → 석방 후 3일 만에 필로폰 1회 매수, 3회 투약하여 구속
- ▶ '20. 11.~'21. 7. 케타민 3회 투약, 1.6g 소지한 연예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기각 → 불구속 기소 후 징역 8월 선고
- ▶ '19. 6.~'20. 4. 필로폰 2회 매수, 2회 투약한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석방 → 이후 여죄 밝혀져 구속, 징역 10월 선고

### 2. 적극적 양형부당 항소

- ▶ '22. 2.~12. 필로폰 9회 매수, 7회 지인에 교부, 14회 투약, 20g 이상 소지한 유명 작곡가(동종전력 2회)를 구속기소하여 징역 5년 구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선고되었으나 항소
- ▶ '22. 3.~12. 대마 4회 매수, 5회 매도 등 고위층 자녀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되었으나 항소
- ▶ '22. 1.~8. 액상대마 4회 매수, '22. 11. 액상대마 0.9g 소지한 대기업 창업주 손자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되었으나 항소
- ▶ '22. 7.~10. 대마 3회 매수, 흡연한 제벌가 3세를 구속기소하여 징역 1년 6월 구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되었으나 항소
- ▶ '22. 10. 액상대마 100개 및 대마 28g 매도, '22. 11. 액상대마 134개 및 대마 58.2g 소지한 사업가(동종전력 1회) 구속기소하여 징역 15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선고에 대하여 양형부당 항소한 사례 등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양형이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

- (청소년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재활 병행) 단순 투약자나 청소년 등에 대하여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 치료·재활 기회 확대, 구속된 마약중독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적극 청구
- (치료·재활 시설 및 예산 확보 추진) 국무조정실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부족한 마약중독 치료·재활 및 교육시설의 확충 등 추진
- 원활하고 신속한 치료·재활·교육을 위해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위탁기관의 다변화 방안 검토
- ※ 서울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현재 3개소 운영, '23년 센터 1개와 마약중독 정신 재활시설 2개소 확충 예정) 및 청소년 심리지원센터(강남구 사이심 등) 등을 운영, 「마약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21년 32명, '22년 72명 등 치료비 지원) 사업 진행



### ▣ 피해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검찰)

-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는 특수상해·폭행, 아동학대범죄 등에 해당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치료비·심리상담 지원대상으로서, 각급 검찰청은 피해사례 접수시 원스톱 지원

### ▣ 학교·학원가 24시간 안전체계 강화(서울시, 경찰청)

-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 등 시민 안전을 위해 市 산하 18개 區를 통해 설치·운영·관리하는 CCTV(약 6.1만대) 연계, 사건·사고시 市 안전통합상황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자치구 실시간 영상정보 중계역할 수행(7개 자치구 2.6만대 추가 연계, '23. 12.)

-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의심자 모니터링하여 즉시 경찰청(112)과 연계, 정보제공 및 대응지원, 핫라인 구축

※ '매의 눈' 관제요원, 1,900대 CCTV 속 포착한 마약거래 현장('20. 2. SBS 보도)

- 마약범죄가 우편함·실외기 등 주거밀집지역에 '던지기'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 이상 행위자 모니터링 실시·지원 및 경찰 순찰 강화

### ▣ 「신종유형 발생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주변 예방 순찰·교육 강화(경찰청, 서울시, 법무부, 식약처 등)

- 「신종유형 발생경보 시스템」\* 가동, 학교 주변 음료제공 등 이상행위 발생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토록 안내\*\*, 마약범죄 피해 예방

\* 「신종유형 발생경보 시스템」은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발생시 학생·교사·학부모 등에게 카드뉴스, 포스터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파하여 범죄예방, 전국 초·중·고 쏠 학교·학부모·학원총연합회 대상 상황 전파

\*\* 처벌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사례 및 피해자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적극 신고하라는 내용의 카드 뉴스 제작·홍보

- 학교전담경찰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등이 청소년들의 등·하교 및 학원 이용 시간대에 주요 통학로 및 학원 밀집 지역 집중 순찰 강화

※ 서울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25개구 800여명) 등을 통한 학교 인근, 학원 밀집가 **식음료 제공행사 점검강화**

- 학교·학원가 주변,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광고,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

※ [식품위생법위반 등 점검('23.4.17.~4.21.)] 학교·학원가 주변 등 200곳 이상  
[약사법위반 점검('23.4.17.~4.28.)] 시·군·구별 병·의원, 약국, 신문, 온라인 광고, 학교·학원가 주변 등 50곳 이상 탐문, 인쇄물, 시음·음료 배포 행사 등 **집중 점검**

## ▣ 미성년자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예방교육·홍보(법무부, 교육부 등)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이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선도 활동 강화**,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함께 학교·학원 주변지역을 순찰하며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제도 등 실시**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의 선도활동 사례

- 초등학교 주변 우범지역 야간순찰, 유해환경 정화활동(창원지검, 23. 1.)
-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물질 판매 업소 대상 선도활동(안동지청, 22. 11.)
- 포천시 학교 주변의 학교폭력 선도 캠페인(의정부지검, 22. 9.)

-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유사사례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 조치**

-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마약예방교육이 반드시 실시되도록** 교육청 별로 학교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지도강화

- 학교 가정통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마약 및 약물오남용 관련 가정 내 자녀지도 안내 및 위험성 인식 제고**

※ 마약류 피해 주의안내('23.4.7.) 학생 마약류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23. 9.)

- 법무부와 협업, **찾아가는 마약예방 법교육 확대 실시**

### <법무부 협업, 찾아가는 마약예방 법교육>

- 지원기간 : '23. 3.~12.
- 지원대상 : 초·중·고 각 학교급별 학생
- 지원내용 : 법무부 소속 마약관련 전문가들이 신청 학교를 찾아가 최대 10회까지 학생 참여형 마약예방 법교육 실시

학교급	대상	신청기간	지원기간
초등학교	전국 초등학교(14~4학년)	2023. 3. 16. (목) 9시 ~ 4. 20. (목) 23시	2023. 3. 29. (목) ~ 12. 8. (금)
중·고등학교	전국 중·고등학교	2023. 3. 29. (목) ~ 12. 8. (금)	2023. 3. 29. (목) ~ 12. 8. (금)

## 5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그동안 기관별·지역별·영역별\*로 분리·진행되던 마약수사에 대하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라는 컨트롤타워의 구성 및 설치로,
    - ❶ 유기적인 수사협조, ❷ 신속한 정보공유, ❸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 등으로 수사 효율성의 증대 가능함
- \* 종래 검찰은 해외 사법기관 등과 연계하여 광역단위 대규모 마약 밀수,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을 중점 단속 / 경찰은 현장 중심의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사범을 중점 단속 / 관세청은 공항·항만 마약류 밀수사범을 중점 단속
- 또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청소년들의 마약범죄에 노출상황을 차단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미래세대의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음 ☑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과	책임자	과 장 백승언 (02-3150-0141)
		담당자	계 장 이주만 (02-3150-2171)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2-481-7844)
		담당자	사무관 전경수 (042-481-7844)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43-719-2893)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043-719-2804)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형 (02-2133-7505)
		담당자	팀 장 이서진 (02-2133-7507)